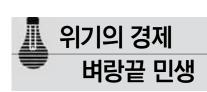


光州日邦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 —8111 kwangju.co.kr 제20368호 1판 (음력 10월 12일)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최순실·트럼프 '쇼크' 한국경제 '내우외환' 광주·전남은 난파 위기



② 한 치 앞이 안 보인다 전남 조선산업 침몰에 광주 자동차 수출 타격 소비위축 더 심해질 듯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경기 불확실 성이 커지고 경기 침체 국면이 이어지면 서 지역 경제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사실상 국정이 마비 상 태에 빠진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 럼프 쇼크'가 지역 경제에까지 큰 파장 을 미치고 있다.

◇美 대선·최순실 쓰나미에 난파 위기=10일 경제당국은 "트럼프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공약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미국의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출 부진에 내수 둔화가 겹치며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 관의 진단이 나왔다. 더불어 수출과 내 수를 짓누르는 부정적 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터여서 경기 부진이 더욱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이라는 변수가 등장하기 전에도 한국 경제는 '기초 체력'이 급격 히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급기야 지난 9 월에는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일제히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갤럭시 노트7 단종 사태 등의 영향으로 올 9월 소 비(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4.5% 감소, 2011년 2월(-5.5%)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더욱이 개각이 단 행됐지만, 최순실 사건 등의 영향으로 새 경제팀 출범이 오리무중 상태가 되면서 경제 부처들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자동차·철강 수출 불확실성 커져 =광주·전남 지역경제는 주요 산업의 부진으로 제조업 등 생산은 급감하고 장 기불황에 따라 소비는 위축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조선산업의 침몰은 또다시 지역 경제 침체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정부와 전남도가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 조선업 근 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손길이 미치기 전에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지난 9월 기준 광주·전남의 경제사정은 가전제품·반도체·선박·석유제품 등 주력 업종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며 무역수지 흑자폭도 축소됐다. 수출은 33억74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7%, 수입은 22억7200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6% 각각 감소했다. 연간기준으로는 수입이 194억 9300만 달러로 21.8% 감소한 반면 수출은 314억 1700만달러 11.0% 감소, 무역수지 기준으로 119억24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가전의 수출 전선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광양제철 등 지역 철강업계와 휴대폰 등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도 타격 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이 전면 재협상되면 대미 수출의 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대내·외경제 흐름을 정확히 읽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주말 서울 사상 최대 '촛불 항쟁'



받는 시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화대로 1번치 박근혜 귀하

내통령 해입명령서 발송기자학

"국민의 이름으로…박근혜 대통령 해임"

통령직 해임 명령서'엽서 5311장을 청와대로 발송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조합원들이 10일 오전 광주 북구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해임명령 엽서 발송 기자회견'을 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 각자가 서명한 '박근혜 대/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세 번째 주말집회 50만 이상 전망 "역사적 순간 함께"…광주·전남 2만 2000명 상경 준비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 령 퇴진을 촉구하는 세 번째 주말집회가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2·3·4·7면〉 주최 측은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에서 최대 100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최다 인원을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집회는 그동안 각계 각층에서 분출됐던 박 대통령 하야 요구가 최고조에 이르러 현 시국의 분수령

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0일 경찰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2일 오후 4시 서울 광장에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 궐기' 집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불 거지기 전부터 기획된 행사로 민주노총 등 에서 인원을 대거 동원하는데다 야 3당도 장외투쟁에 역량을 쏟기로 한 만큼 2000 년대 들어 최대 규모 집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경찰은 청와대 쪽 진입로를 '마지 노선'으로 두고 행진을 차단한다는 입장에 는 변함이 없지만 주최 측은 1부 행사를 마 치고 오후 5시부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노동자, 농민, 학생 등 2만2000여명이 버스를 대절해 민중총궐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차례에 걸쳐 '총궐기 대회 참여는 위법'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며 압박을 가한 광주시청, 전남도청, 각 시군 소속 공무원 노조원 2000여명도 참가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당일 최소 50만명에서 최대 100만명, 경찰은 16만~17만명을 예상한다. 2008년 촛불집회 기간 최다 인원이모인 6월 10일에는 주최 측추산 70만명, 경찰추산 8만명이 모였다. 경찰추산으로는 당시 규모를 넉넉히 웃돈다는 얘기다. 이는 2004년 3월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규

탄 촛불시위(경찰 추산 13만명. 주최 측 추산 20만명)를 넘어서는 규모이기도 하다.

경찰은 이날 2만명 이상을 투입해 집회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두 차례 열린 주말 촛불집회에서처럼 시위대를 자극하는 언 행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하는 기조를 이번에도 유지한다.

민주노총은 10만명이 서울광장에서 청 와대 입구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까지 전 차로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까지만 행 진하라며 '제한 통고'했다. 사실상 금지 통 고다. 이와 별도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청와대 방면으로 각 2만명이 4개 경로를 행 진하겠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이 역시 민주 노총 측 신고와 마찬가지로 제한 통고할 방 침이다. /김형호기자 khh@·연합뉴스

내년 예산 광주시 4조416억원·전남도 6조3735억 편성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4조416억 원, 전남도는 6조3735억원으로 편성됐다. 〈관련기사 5면〉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4조605억원보다 188억원(0.5%)이 줄어든 4조41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는 1470억원(4.7%)이 늘어난 3조2751억원 이고, 특별회계는 1658억원(17.8%)이 줄 어든 7666억원이다.

지난해 첫 4조원대를 돌파한 광주시 예산이 준 것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일반기금으로 전환된데 따른 것으로, 지역개발기금 1512억원을 포함하면

1324억원(3.3%)이 증가한 셈이다.

전남도도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6조 4352억원)보다 617억원(0.95%)이 줄어든 6조3735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8% 늘어 5조7112 억원이지만, 특별회계는 24.7% 줄어 6623 억원을 기록했다.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

역개발기금이 일반기금으로 전환돼 예산안 에서 빠진 것이 예산 감축의 원인이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친환 경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등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발굴 등 역점 시책에 중점 배 분했다. 전남도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 등 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 _____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